【논문】

북한 개방의 선험적 조건

진 병 운*

【주제분류】 정치철학, 역사철학
【주 요 어】 햇볕정책, 민주주의, 시장경제, 국부, 천부인권, 사회주의, 역사심판
【요 약 문】 목하 진행 중인 신의주 행정 특구, 개성공단, 금강산 개발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개방정책이 과연 시장경제로의 첫 발걸음으로서 환영받아 마땅한가의 문제는 한편 햇볕정책의 최종 성과에 대한 평가 문제로 이어지며, 또 다른 한편 시장경제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촉구하고 있다. 시장경제에 대한 경험과학적 이론이 최초로 아담 스미스를 필두로 한 고전 정치경제학파에 의하여 체계화되어 마르크스가 지적한 바대로 자본주의 경제학이 되었다는 것은 식자들 간에는 꽤 알려진 역사적 사실이지만, 이 고전정치경제학 자체가 로크를 시조로 하는 영국 경험론 전통을 직접 계승하고 있고, 공리주의 운동 자체를 경험과학적으로 직접 대변하고 있다는 철학사적 사실은 그다지 널리 알려 있지 않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마르크스적 부정이 프롤레타리아 독재, 곧 직접민주주의로서 인민민주주의로 역사적 발전을 한 반면, 시장경제의 고전경제학파에 의한 체계적 파악은 애초부터 대의민주주의를 전제하고 있었고, 오늘날에 와서도 시장경제와 대의민주주의는 컬레로서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두 요소이다.

역사적 대의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동일한 철학적 전통과 원칙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로크가 설파한 생명·자유·재산이라는 불가양도의 천부인권과 대의정치제이다. 실제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국가의 헌법은 로크가 주창한 천부인권을 머리말로 삼고 있거나, 그 정신을 답습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이 자유민주주의 전통과 마르크스 이래로 대치하여, 20세기에 세계 질서를 양분할 사회주의체제는 서양계몽시대의 산물인 자연권으로서의 인권 사상(예를 들면 자유와 평등으로서의 인권)은 계승하면서도 이중에서 사유재산권, 동시에 부르주아 국가에선 이와 컬레를 이루는

* 서울대 강사

대의민주주의를 폐지하는 것을 체제의 골자로 하여왔다. 이 두 체제의 세기적 대결을 냉전이라고 하는데, 냉전은 세계질서를 양분함과 동시에 인류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냉전의 승패를 헤겔 역사철학 관점에서 세계사의 심판이라고 부를 수 있다.

세계냉전은 10년 전에 끝났는데, 냉전의 지역적 산물인 한반도 분단 체제는 오늘날까지 해체될 줄을 모르고 있고, 반세기에 걸친 우리 민족 분단체제의 극복을 위해 5년 전부터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야심적인 정책이 햇볕정책이다. 따라서 이 정책의 최종 성과에 대한 평가 시도는 그 자체가 역사철학적 반성의 기회가 아닐 수 없으며, 평가는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북한의 탈냉전에로의 변화 정도를 대상으로 한다. 철학적 반성에 따라 나타나는 시장경제, 인권, 민주주의, 독일의 흡수통일이 평가기준이 될 것이고, 수백만 명의 우리 동포를 인간 이하의 굶주림에 몰아넣으면서 농축 우라늄에 기초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는 북한 수령 체제가 따라서 평가의 직접적 대상이다. 북한 정권은 이제 미국 공화당 행정부에 의해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세워지려고 하고 있다. 북한 체제의 붕괴만이 북한 우리 동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 몸을 움직여 먹고사는 천부인권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한반도의 주인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다.

Ⅰ. 시장경제와 국민국가

우리에게 신의주 특별행정구 설치가 충격적인 것은 북한이 9월 26일 관영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이 지난 1990년 4월에 채택된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과 상당히 유사한 법적 체제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 예를 들면 특구의 자치권 보장, 사유 재산 인정 및 상속권 보장 같은 것이 아니고, 한겨레신문이 10월 3일 보도한대로, "신의주 특구 개발계획을 위해 주민들의 대량 이주가 준비되고 있어, 북한은 2개 사단 병력을 투입해 이 달부터 신의주 주민 50만 명을 소개시키고 정보기술 인력 5만 명을 포함한 개발

인력 20만 명을 새로 입주시킬 예정이다"라는 보도이다. 물론, 지난 반세기 동안 자유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살아온 우리 지성은 이런 주민의 대대적 소개와 입주 계획을 바탕으로 한 신도시 건설 청사진 자체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차분히 생각해보면 이 계획은 이미 1년 8개월 전에 임동원 국가정보원장이 보고한 '내외 격리식 개방'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양빈(楊斌) 신의주 특별행정구 장관이 10월 1일 무비자 입국에 대한 당초 발언과는 달리 특구 무비자 입국은 신의주 외곽에 타지역과의 격리 장벽이 설치된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만함으로써 단순한 구상이 아니고 현실로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놀란 가슴은 진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의주를 홍콩보다 더 자본주의적 특별도시로 만들겠다는 놀라운 기획 뿐 아니라 북한의 정부가 전심전력으로 추진해 온 햇볕정책의 긍정적 효과로서 여겨지고 있는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의 전체가, 즉 현대아산이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을 비롯하여 남포, 그리고 동해안의 금강산, 원산, 청진 등의 경제특구 기획 전부가 '선군 정치'와 '내외 격리식 개방' 개념에 의해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제시하고 있는 이런 개혁 개방 청사진이 실현 가능해 보이고, 따라서 우리 사회 내부에, 특히 햇볕정책 추진 주체인 국민의 정부안에 기대 희망 환영 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며, 이러한 우리 민족의 장래에 대한 역사적 낙관주의의 사회 과학적 근거는 북한 역시 남한이 일찍이 체험하여 그 효험을 본 '개발 독재' 과정을 다시 한번 실험하면서 동시에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궁극적으로는 남한과 동일한 경제 체제, 즉 '시장경제 체제'에 도달한다는 생각이다. 물론 여기서 햇볕정책이 기대하는 바의, 북한식 개방의 종착역이 과연 현재 남한의 경제 체제와 일치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명료하게 정의될 수 없는 그 어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귀착될 것인지의 문제가 의문으로서 남을 수밖에 없는 점은 용인한다 하더

라도, 위에서 우리가 언급한 햇볕정책의 사회 과학적 근거는 무릇 시장경제라는 것 일반의 선험적 조건, 예컨대 최부 인권인 자유와 사유재산권 등에 대한 고찰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우리는 국가의 존재 이유, 삶의 목적, 인류 보편 가치의 존재, 인간 존재에 고유한 선험적 원리 여부 등 철학의 고전적 주제들이 우리 시대 사회 과학 일반의 방법과 관심의 영역 밖에 놓여져 있는 사태를 현실로서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사회 과학 일반의 이러한 생태적 한계가 햇볕정책의 주체이며 한국 헌대사를 인권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왜상하였다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국민의 정부'에 의해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내지 전망은 역사 비관주의의 재림을 예감하게 한다.

현내 경제학, 좀 더 엄밀히 말해서 자유 시장의 경제학은 1776년 3월에 발간된 아담 스미스의 「제(諸)국민의 부(富)의 성질 및 원인에 관한 연구」*(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에서 시원(始原)한다. 「국부론」이라는 약칭으로 더욱 알려져 있는 이 책의 저자, 아담 스미스는 우리 사회과학계에서도 명실상부한 '고전 경제학'의 시조로서 인지되고 있는 한편, 저자는 세계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그의 저서 제4편의 서문에서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정치 경제학을 입법가나 정치가가 갖추어야 할 학문의 한 분야로서 고려할 때, 이 학문은 두 가지의 서로 구별되는 대상을 목적으로서 제안하고 있다: 첫째, 국민에게 풍부한 수입 또는 생활 수단을 공급해주는 목적, 이를 다시 더 엄밀히 말하면 국민이 자력에 의해 이러한 수입 또는 생활 수단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국가 또는 정치 공동체에게 공공사업과 업무를 위한 충분한 수입 재원을 공급하는 목적이다. 한 마디로 말한다면, 정치 경제학은 국민과 주권자, 양자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사에서 국민이 국사에 발언권을 갖게 되는 과정, 즉 민주화 역사는 국민이 부의 실질적 생산자가 되면서 국가 재정의 배타적 공급

자가 되는 과정과 일치한다.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현대 민주주의의 요람인 영국은 말할 것도 없이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의 나라에서 민주주의 발전 초기 단계에는 '일반 보통 선거'가 아니라 '납세액에 의한 제한 선거'가 이론상이나 실제적으로 원칙이었던 사실이 이해될 수 있다. 또 이런 구조의 민주화 과정은 (상품과 노동의) 자유시장이 천폐되거나 또는 국가에 의해 장악되면 정치는 예외 없이 독재 내지 전제주의로 전락하는 세계사적 경험을 통하여 부정적으로 검증되었을 뿐 아니라, 이 검증 과정을 매개로 하여 그 자체가 세계사의 방향과 목적을 필연적으로 규정하고 선도하는 유일한 역사 법칙적 운동이 되었다.

이 역사 법칙적 운동의 최종 결과는 아담 스미스의 '정치 경제학'에 대한 정의(定義)를 확증하고 있다. 즉, 국민 각자가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서 자본 축적(accumulation of capital)의 자유를 구사해온 국가만이 국민과 주권자 양쪽 모두가 생산되어 축적된 엄청난 천문학적 부를 향유하고 있는 사태가 다름 아닌 「국부론」 발간 이후 250년이 지난 오늘날의 세계 현실이다. 게다가 또 그 국민 경제가 이러한 경이적인 자본 축적을 이룩한 나라는 예외 없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형식적 민주주의'라고 조롱해 마지않았고, 나치(Nationalsozialist: 국가사회주의자)가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진주곡으로 불태워 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의회(Parliament)가 민주정치의 심장으로 확립되었다. 국민 각자가 '자유방임시장'(free market)에서 자신의 개인적 이득을 추구하여 자본 축적을 할 수 있었던 나라에서만이 의회 민주주의 내지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생성, 발전, 확립되었던 이 역사적 사실은 자본주의 경제와 의회 제도는 생태적으로 시로를 전제 내지 요청하는 도식(schema)을 그리면서 발전해왔음을 추정하게 한다. 바로 이런 역사적 이유 때문에, 루소가 그의 『사회 계약론』 초고 제3부 제1장에서 단언하는 바대로, "법 하나 하나는 일반 의지의 행위인 만큼 오로지 일반 의지의 주체인 국민에게 배타적으로 귀속한다는 입법권"만이 사실 국회의 유일한 속성이 아니고, 이미 루소와 동시대인 아담

스미스가 말한 대로 국민이 생산하여 세금의 형식으로 조달한 재원이 정부 관할 하에 수입 지출되는 전 과정을 승인, 감사, 비준하는 권한 역시 루소가 말하는 입법권에 못지 않은 국회의 생래적 속성이었다. 그런데 자유시장 경제와 의회 제도의 이런 상관관계의 도식은 이미 영국의 사회 현실이 되어, 사변 철학이 아니고 경험과학인 아담 스미스의 '고전 경제학'은 이를 전제,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부론>을 직접 계승하여 '자유시장의 경제학'의 체계를 세우는 데 누번째로 공헌한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와 그 저자 데이비드 리카도의 하원 의원으로서의 경륜을 통하여 더 할 나위 없이 명료히 들어 난다.

여기서 우리는 '고전 경제학' 또는 '자본주의 경제학'이 영국에서 의회제도의 민주화 과정에 병행하여 발전해 간 점 이외에 이 새로운 학문이 영국 경험론 철학에 발생적으로 결부되어 있음을 특기하여야 할 것이다.

고전경제학과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도전이 1990년 사회주의 진영의 전반적 붕괴로 세계사의 심판을 받은 지 어언 십여 년이 흐른 오늘날 우리 철학도는 사회주의 체제 일반이 예외 없이 정치에선 민주주의를, 경제에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실현하는 데 철저히 실패한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자유시장 경제학과 대의민주주의의 공통된 철학적 원칙, 즉 영국경험론의 기본 원리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성찰할 의무가 있다. 사실, 사회주의 진영의 자체 붕괴가 직접적으로 가져온 냉전의 종식은 동시에 세계사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일방적 개선(triumph)을 만국에 선포하게 되었던 바, 세계사의 월계관을 쓴 이 승자의 철학적 원리들은 다름 아닌 영국경험론의 시조인 로크(John Locke: 1632~1704)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0년 이후로 우리가 당면하게 된 이 세계사적 사태를 맥종헌저, 2001년 철학과 현실사 간행, 『서양근대철학』의 구성을 원용하여 기술하여 보자.

> 늦어도 1681년경에는 착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로크의 『통치론』 집필 동기가 그 자신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명예혁명(1688~1689)의 이론적 정당화에 있다는 점, 결과적으로 그의 통치론에서 개진된 민주주의 대의정치론은 명예혁명 이후 세계정치 문화를 선도하는 사상이었다. 로크의 정치사상은 영국의 '권리장전'(1689)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독립선언문'(1776)과 그에 이어지는 미국의 '헌법'(1789) 그리고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1789)의 정신과 그 핵심을 같이 하고 있고, 이 기본 정신이 오늘날 거의 모든 세계 각국의 인권 사상과 헌법의 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로크의 통치론에서 주장된 재산권 이론이 오늘날 자본주의 정당화 이론의 골자인 점을 헤아릴 때, 로크의 통치론은 근대 시민사회, 특히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로크의 『시민통치에 관한 논고』는 오늘날 민주 사회에서라면 시민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 구성원의 권리와 통치 체제의 정당한 운영 원리를 계몽적으로 논설하고 있다."[1]

따라서 우리는 1990년 이후 확연히 전개된 세계 질서란 로크로부터 이미 정초된 자유민주주의의 실제적 세계화에 다름 아닌 사실과 이 자유민주주의는 인권, 사유재산권, 대의 정치제(representative system) 세 개의 기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난 세기의 역사 경험은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이 세 요소가 분리되어서는 그 어떤 요소도 단독으로 실천적 내용을 갖출 수 없었음을 확인하는 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상주의나 초월주의의 이름으로 이 세 요소를 임의로 분리하여 그 중 하나를 절대 가치로 보는 나머지 다른 요소들은 등한시(等閑視)하는 사조와 운동이 우리 사회에 풍미하고 있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세계사의 경험과 판단을 자유자재로 뛰어 넘는 이런 이상주의적 사조와 운동의 대표적인 한 예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백낙청 교수의 글 「한반도의 2002년」에서 인지된다: "이미 여러 곳에서 되풀이해온 말이지만 나 자신은 5백 년 이상 지속되어온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수십 년 안에 어떤 식으로든 그 수명을 다하게 되어 있으며 동시냉전의 종말은 자본주의의 승리

1) 『서양근대철학』, pp.270-271.

라기보다 그 최종단계의 시작으로 보아야 한다는 분석에 신빙성을 두고 있다. 이럴 경우 9·11사태 자체가 세계사적 전환점이라기보다는 1989년 이래 본격화된 세계적 혼란기를 미국민을 포함한 다수 인류가 실감하게 된 계기로 인식할 수 있다."[2]

이상의 글에서 드러나는 백 교수의 역사관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고유한 학문·사상의 자유의 '불언적'소산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나, 또 다른 한편 이 역사관에 기초하여 구상된 백 교수의 '분단체제극복론'이 과연 어떻게 한반도의 '민중'이 자신을 위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피할 수 없는 것 또한 우리의 진박한 심정이다. '현실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세계적 대립으로 특징 지워지는 이른바 동서냉전이 1989년 이래, 자본주의의 승리로 대체된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이 절정에 달하는 이른바 "국가폭력과 비국가폭력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기근과 질병으로 희생되는 인구마저 늘어난다면 그야말로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암흑의 시기"[3]로 진입하였다고 보는 백 교수의 역사관은 현실사회주의의 실제적(realist) 부정과 자본주의의 이상적(idealist) 부정을 결합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는, 저자가 「한반도의 2002년」 본문에서 하는 것 같이 자본주의의 이상적 부정이 계시록적인(apocalyptic) 양상을 띠는 방식으로 강조되면, 현실사회주의의 실제적 부정은 현실성을 상실함과 동시에 관념적 존재가 되면서 현실자본주의의 이상적 부정이 절박성을 갖고 의식의 전면에 부상하게 된다. 게다가 우리는 세계사안에 이런 이상주의자들에 의한 현실자본주의의 진박한 부정의 효시적 선례가 있음을 알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현실사회주의를 보르면서 현실자본주의의 진박한 종말을 세계만방에 공언하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Manifeste du Parti communiste)*이다. 사실 "공산당 선언"을 받치고 있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역사의식 역시 '현실자본주의의 임박

2) 「창작과 비평」, 2002년 봄호, 백낙청 글, p.16.
3) 같은 잡지, p.19.

한 종말'에서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는 자본주의'를 그 공통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월러스틴이나 백낙청의 역사의식과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후자는 현실사회주의가 보편적으로 몰락한 1989년 이후 1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자본주의의 운명에 대하여 150년 전의 과학적 사회주의의 원조들과 같은 견해가 다시 대두하는 것을 보고, 마르크시즘이 '이상적 사회주의' 혹은 '청년 마르크스'(young Marx)의 형태로 마치 불사조처럼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자 사이에는 사실 이 공통점만고 상이점 또한 존재한다. 즉 '과학적 사회주의'의 원조들에서는 만국의 프롤레타리아(무산자 노동자)였던 것이 (월러스틴)백낙청에 와서는 민중(콸레스타인 민중, 한반도 민중, 세계 민중)이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사회주의의 세계적 몰락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주장되는 백낙청 교수의 '자본주의 종말론'이 '과학적 사회주의'의 핵심 개념인 보편계급(universal class) 프롤레타리아를 세계 민중으로 대체하였다 하더라도, 문제의 핵심은 전자가 현실사회주의 체제하에서도 쟁취하지 못한 것, 예를 들면 민주주의, 인권, 물적 풍요, 등을 후자가 어떻게 현실자본주의가 계시록적 양태를 보이는 시기에 달성하는가에 있다. 사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민주주의, 인권, 물적 풍요는 이미 로크의 통치론에서 근대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으로서 정초된 이후 근·현대사를 이끌어 온 가치요 목적이었으며, 과학적 사회주의의 원조들 역시 수단을 달리 한지언정 이 목적 추구에 예외가 아니었으나, 백낙청 교수의 민중 개념은 이들 가치의 실현수단뿐 아니라 목적 설정 자체가 불확실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제 농시냉전이 끝나고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건정적인 불안정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한반도가 분단체제의 극복을 통해 좀더 나은 세월을 내다보게 된 것은 당연한 보상이라면 보상이다."[4]

이런 현대사의 목적론적 관점에서 고찰할 때, 과학적 사회주의의

4) 같은 책, p.19.

실천이요, 실험이었던 현실사회주의가 전반적 실패로 끝난 사실과 사회주의 현실 일반을 후려친 이 필연적 운명으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부인한 (특히 1989년 이후로) 지식인은 없겠지만, 때에 따라선 의회민주정치나 과잉생산소비경제에 서의 실패에 대해선 동의한다 하더라도 '인권'에 관해선 유보적 내지 불가지론적 태도를 취하는 지식인들이 있다. 물론 인권에 대한 이런 태도에는 인권을 초역사적 가치로 신대화함으로써 인권의 '구체적 실현'을 가소롭게 보이게 하기나 아예 불가능하게 보이게 하는 태도도 포함된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태도를 대변하는 지식인의 대표적인 예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백낙청 교수이다.

백낙청 교수가 양차 세계대전 동안에도 본토가 공격받은 일이 전혀 없던 미국에서 계시록적 재난을 당한 2001년 9월 11일 이후 수많은 지식인들이 애국주의자로, 열렬한 전쟁지지자로 돌변한 사태를 비평적 눈으로 보는 이유는, 백 교수가 인권을 인류 보편 가치로서, 즉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연권'으로서는 확고히 믿고 있지만 인권이 로크 이후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실현된 구체적 과정을 모르거나 도외시(度外視)하기 때문이다. 물론 "막두한 세계혁명에서 자유를 구속하는 사슬이외에는 잃을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고 앞으로는 생취할 세계만이 남아 있는 만국의 프롤레타리아"[5]의 입장에 서면 미국 지식인들의 돌변이 이해없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로크가 정초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 가치관의 입장에 서면 미국 지식인들은 그들의 '천부인권'을 사수하기로 각성한 것이다. 위에서 이미 인용한 백종현 교수의 『서양근대철학』의 한 구절을 다시 한번 원용해 보자. "로크에 따르면, 국가 공동체(commonwealth)의 성립 이전에 사람들은 자연 상태(state of nature)에 있었으며,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연적인 권리로서 생명(life)·자유(liberty)·재산(estate)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니, 이것은 불가양도의 천부인권이다.[6]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직시하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인간이 태어

5) 『공산당 선언Manifeste du Parti communiste』의 맨 마지막 문장, 필자 번역.

나면서 자연과 함께 자연에 의해서 부여받은 생명·자유·재산 같은 천부인권은 '자연 상태'에선 보장받을 도리가 없으며 오직 '국가 공동체'를 통해서 만이 방어 받을 수 있다는 진실이다. 따라서 9월 11일 테러로 그들의 천부인권이 미증유의 위기에 처했을 때 수많은 미국 지식인들이 (만장일치로 단결한 그들의 상·하원 대의원들의 뒤를 따라) 연렬한 '전쟁지지자', '애국주의자'로 변신한 것은 오직 국가만이 천부인권을 방어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자각한 가장 극적인 발로(manifestation)가 아닐 수 없다. 경제, 과학, 사상에 있어선 세계 지평(universal horizon)을 바탕으로 대상으로 하는 것이 현대 시민사회(civil society)이지만, 역설적인 것은 (이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은 오직 국민으로서 만이 자기의 천부인권을 방어할 수 있는 법이다. 또 이 진리로부터 자명하게 파생되는 첫 번째 명제가 (국민의 양도불가의 천부인권에 상응하는) 국가 절대 이기주의다.

문제는 국가가 국민의 천부인권을 어떻게 인식하여 이것의 보호와 신흥을 자기의 존재이유로 삼을 수 있는가 이다. 인간의 자연권, 천부인권이 서양 근대사를 여는 '정치적' 대사건들 — 영국의 권리장전(1689), 미국의 독립선언문(1776), 미국의 헌법(1787), 프랑스 대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1789) 등 — 을 통하여 인류 보편 가치로서 선포될 때 이미 정치적 함의를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렇게 시대정신으로 대두되는 천부인권 사상에 합당한 정치체제 즉 국가를 구상하는 것이 홉스, 로크로부터 루소를 거쳐 헤겐에 이르는 근대정치철학의 핵심 과제였다. 물론 이 핵심 과제는 대륙이성론을 계승한 독일관념론에서와 영국경험론 전통에 서 있는 공리주의에서 접근과 해법을 달리하는 것 또한 사실이나. 근대정치철학 안에서 이렇게 독일관념론 전통과 영국경험론 전통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 전통이 처음부터 끝까지 공유하는 대전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각 신체(body)에 내재한 인격(person)과 이 인격존재의 고유한 권리인 소유권(property)이다.

6) 배종현, 같은 책, p.271.

그런데 이 서양근대정치철학의 대전제의 참뜻, 역사적 의미는 그것 위에 구축된 철학, 신학, 경제학, 법학 등 이른바 일체의 상부구조물은 부르주아 계급(유산 계급)의 이해와 의식을 대변하고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마르크스의 주장에 의하여 (우선 부정적인 방식으로) 발견되었다. 마르크스의 이 천학적 주상은 다시 그의 '과학적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 프로그램인 "공산당 선언"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현실관찰과 정강(政綱)을 통해 표출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 볼 수 있다.

> "[한편]부르주아 계급은 가장 나후된 야만 민족들(nations)까지도 문명의 흐름에 끌어들이고 있다. 값싼 그들의 제품이야말로 중국의 만리장성 전체를 깨 부수는 포대와 같아 외국인들에 대해 가장 완고하게 적대적이던 야만인들조차 항복시키고 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nations)이 죽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르주아 생산방식을 채택하도록 강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부르주아 계급은 모든 나라들이 소위 문명이라는 것을 도입하도록 몰아 부치고 있는 데, 이 문명이란 다름 아닌 부르주아 문명일 뿐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부르주아 계급은 세계를 자신의 형상에 따라 조형하고 있는 것이다. [… 또 다른 한편] 봉건적 유대로 서로 연결은 되어 있었지만 제 각각의 상이한 이해, 법, 정부 및 관세율을 갖고 있던 지방들이 단일 정부, 하나의 법체계, 하나의 관세율의 지배 하에 하나의 나라, 단일 국민공동체(une seule nation)로 통합되어 하나로 통일된 국민적(national) 계급 이해를 구현하게 되었다."[7]

프롤레타리아가 인류 보편 계급인 것은 부르주아 계급이 경제적으로 세계를 제패했기 때문이나, 이 후자의 이해를 방어해 주는 정치체(body politic)의 형태는 다름 아닌 '국민국가'(Nation State)이기 때문에, 만국의 프롤레타리아가 단결하여 부르주아 계급을 타파하는 혁명 사업은 종국엔 인류 해방과 이 국민 국가의 소멸에 이른다. 마르크스에게 실질적 의미와 현실적 보편성을 갖는 것은 헤겔의 입헌 군주제, 칸트의 법의 보편적 지배 체제인 공화국, 영국경험론 전통에서의 의

7) 강위석 칼럼, 「민족과 지인」, 중앙일보 2002-03-07[중앙시평]난.

회 민주주의, 대의정부 등이 아니고 부르주아 계급 이해를 구현하는 국민국가들의 세계 체제이다(world system of Nation States). 현실사회주의의 세계적 와해 이후 들이선 세계 질서를 '신자유주의'라고 부르고 있는 데, 이 신자유주의를 받치고 있는 정치 질서가 바로, 150년 전 마르크스가 설파한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민 국가들의 세계 체제이다. 바로 이런 역사적 이유 때문에 오늘날 미국 뿐 아니라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러시아, 중국은 물론 그 내용으로 세계화 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국민경제(national economy)의 내용을 채워 가면서도, 국제정치에서의 행동 원칙은 국가 이기주의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지식인들은 신자유주의가, 고전 정치경제학 시조 아담 스미스, 리카도 등이 설파한 자유주의가 그랬던 것처럼, 경제상의 국경은 넘어뜨리지 정치적 국경은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시해야만 할 것이다. 오늘날 이러한 세계체제의 구성 요소인 자유주의와 국가이기주의를 동시에 전면에 내세워 마음껏 구사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백악청 교수가 고발하고 있는 미국이며, 미국의 이러한 속성을 더할 나위 없이 극적인 방식으로 만천하에 드러낸 행사가, 위에서 우리가 지적한 바 있듯이, 9·11 테러를 계기로 수많은 미국 지식인들이 애국주의자, 진쟁주의자로 전향한 사실과 이 거국적 일기의 추세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벌린 진쟁이었으며, 또 이 거국적 애국심의 고취를 배게한 상징적 행위가 그들의 공민교육의 중심인 '국기에 대한 맹세'(The Pledge of Allegiance)이다. "나는 미합중국의 국기와, 모두를 위한 자유와 정의가 있으며, 나눌 수 없으며 신 아래에서의 한 나라(one Nation under God, indivisible)인 공화국에 충성을 맹세합니다." 부르주아 분명의 정치적 완성은 국민국가에 있다는 150년 전 마르크스의 역사판단은 현실사회주의의 몰락으로 과학적 사회주의가 논파 된 오늘날 명실공히 세계화된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수창자요, 선두 주자인 미국의 행태를 통하여 더할 나위 없이 여실히 그 타당성이 재확인되었던 바, 혹자는 미국의 이런 열렬한 '국민국가적' 이기주의를 '민족주

의'(NATIONALISM) 개념을 원용하여 파악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강위석 씨는 [중앙 시평]에 게재한 그의 칼럼 「민주와 친일」에서 미국의 이런 행태에 대하여, "아프가니스탄에서 치르는 테러와의 전쟁이나 솔트레이크시티 겨울 올림픽에서 보여 주었던,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한 미국의 '민족주의'"[8]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다국적(multinational) 기업과 다민족(multiracial)의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을 '민족국가'로 지칭하는 것을 들으면, 일종의 불협화음 같은 것을 우리 정신이 체험하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이 잡다한 내용이 하나요 나눌 수 없는 실체(one and indivisible nation) 의식으로 집약(集約)될 수 있는가 이다. 이 '하나요 나눌 수 없는 실체'는 보는 각도에 따라 민족, 국민, 국가 등으로 명명될 수 있음을 용인한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의식은 특정 형태의 정치체제 즉 내의민주주의 안에서만 형성 가능함을 우리는 세계사 경험을 통하여 확실히 알게 되었다. 미국과 유사한 연방국이요 다민족 국가였던 소련이 그 정치체제가 붕괴하자마자 다수의 '민족국가'로 해체되었던 사실은 이 정치체제 하에서는 '하나요 나눌 수 없는 나라'에 대한 의식이 형성된 적이 없음을 증언하고 있다고 하겠다. 중화인민공화국 역시 소련과 대동소이한 정치체제에 소수민족 문제를 안고 왔으나, 소련과 같이 1990년 다수의 '민족국가'로 공중분해 되지 않은 것은 덩샤오핑의 주도하에 80년부터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추진되어 90년대까지 10년 동안 두 자리 수의 경제성장이 지속된 기적 덕분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중국의 역사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과연 중국이 현행 정치체제 일당독재를 유지한 채, 시장경제만이 일구어 낼 수 있는 기적의 경제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중국이 당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개념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은 오직 대의정부와 건부된 시장경제에 의해서만 실현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할 수 없는 한, 이것은 과도기적 현상을 기술하는 실험적 개념에

8) 공산당 선언, 필자 번역.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우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영국공리주의나 고전경제학이 말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주체는 '자기의 행복', '자기의 자유', '자기의 재산 증식'을 이기적으로 추구하는 무수한 독립 개인(in-dividuum)이지 인민, 민족, 국민, 부족, 가문 따위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물론 인간은 본래 이기적 존재, 자기보존의 본능에 매인 존재이다, 라는 인식은 인류의 문화만큼이나 오래된 지식이지만, 이 경우 이기적 존재가, 아담 스미스가 그의 『국부론』에서 전제하는 이기적 개인처럼, 자존심을 갖춘 개인(person)인지는 확언할 수 없을 것이다.

> "우리가 오늘 저녁식사를 먹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이나 빵 제조업자들의 박애심 덕분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의 이익추구 행위 덕분이다.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그들의 인정이 아니고 그들의 이기심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언제나 그들의 이익에 관한 것이지 결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것은 아니다."[9]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시작한 지 20년 만에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자기보존의 본능'수준에서 해결한 것은 확실하나, 이와 동시에 그 인민이 이기적일 뿐 아니라 자존심이라는 자의식을 지닌 개인들의 총체를 대변하는 표상(representing Representation)이 되었는가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 여기서 우리는 현실사회주의가 자기보존본능의 자연적 표현인 이기심, 즉 자기의 삶에 대한 적극적 자세와 자기의 삶을 자력으로 경영해 가는 데서 결과하는 개인 주체의 자존심을 '인간 존재'로부터 박탈하였던 역사적 범죄 사실을 우리 앞에 다시 불러 내지 않으면 안 된다. 현실사회주의가 지지른 이 자연법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범죄는 사실 현실사회주의를 모르면서 현실자본주의를 전복하기 위해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자신들의 '과학

9) 아담 스미스, 같은 책, 1권 2장에서 (1994 Mordern Library Ed. p.15), 필자 번역.

적 사회주의'를 실현한 목적으로 작성한 행동 전략 프로그램인 "공산당 선언"에 이미 예고되고 있었지만, 또 이런 의미에선 산업혁명과 더불어 본격화된 시장경제에 대한 최초의 경험과학적 이해 체계를 제시한 아담 스미스의 인류 문명의 역사적 개관 속에서도 이미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 "오늘날 문명국의 최하층 사람(person)의 의식주는 무위호화를 누리는 최상층 명사들의 의식주에 비하면 너무나 소박 단순하게 보이겠지만, 이것 또한 각양각색의 노동이 투입되는 수천 명의 협업과 조력에 의해 생산 공급된 것이다. 한 근면하고 검소한 유럽 농부의 사산과 생활 수준은 물론 유럽 왕세자의 그것에는 못 미친다. 하지만 이 평범한 유럽 농부의 생활 수준은 수많은 야만인들의 자유와 생명(liberties and lives)을 한 손에 틀어 쥔 수백 군주, 아프리카 제왕의 생활 수준보다 사실상 훨씬 더 높은 것이다."[10]

자유와 생명은 자연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적 권리이나, 이 자연권이 불가양도의 천부인권으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되어 — Civil Society —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가 로크나 스미스 뿐 아니라 흄으로부터 헤겔에 이르는 근대정치철학 전체에게 문명(Civil-ization)과 야만을 구별하는 척도였다. 그런데 현실사회주의의 최후의 보루, 다름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연권이 법적 보장을 받는 시민사회(Civil Society)가 어떻게 처참한 (비자연적) 야만 상태, 인권이하의 사회로 전락하였는가를 실증하는 최후의 역사적 사례이다.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의 절대 다수가 처한 참상이 사회주의 경제의 총체적 실패의 결과임을 아는 지식인들은 한국 사회에 꽤 있으나, 이 경제적 실패가 우리 동포의 생명과 존과 자유의 권리, 즉 불가양도의 천부인권을 철저하게 유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지식인의 수는 앞의 경우 보다 적으며, 이 경제적 파탄과 국가적 규모의 인권 유린의 원인, (따라서)

---

10) 같은 책, 1권 1장 맨 마지막 단락, p.13, 필자 번역.

책임이 북한의 고유한 정치체제와 이 체제의 유일한 인간 기체(substratum)인 수령에 있음을 인권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공언하는 지식인은 더 더욱이 적이 보인다. 민족 통일의 대과제를 앞에 놓고 북한의 '현실'에 대한 우리 사회 지식인들의 이런 단편적·추상적·관념적 시각 내지 접근의 대표적 사례의 하나를 우리는 『창작과 비평』 1999년 가을호에서 「기로에 선 현 정권의 대북정책」에 관하여 한완상 선생과의 "긴급대담"에서 리영희 선생이 행한 발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북한을 제대로 보자는 거죠. 물론 북한의 정치체제나 사회체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지만, 북한의 인민대중이 그들의 지도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애정과 존경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북한을 유지시켜나가는 힘이며, 이는 남한의 역대 지도자들이 자리에서 쫓겨나고 권총 맞아 죽어나가고 온갖 부정·부패를 서슴지 않은 끝에 감옥에 투옥되는 따위의 반민중적 사태를 보인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싫든 좋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 불가사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뉴스위크』가 1997년 5월 5일자에 북한 사태 특집을 냈어요. 북한에 다녀온 세계 여러 구호기구의 전문가들을 인터뷰해서 종합한 겁니다. 물론 북한에 대한 이들의 정치적 평가는 당연히 부정적이죠.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적으로 놀라운 사실로 지적하는 것이 있어요. 이들은 과거 르완다, 에티오피아 등 현재의 북한과 같은 위기에 처한 세계 각국을 다녔던 전문가들로서, 한마디로만 봐도 대충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경험적 투시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에서는 그런 대공황·기아사태로 해외원조가 이루어지면, 지원 물자와 기회를 중도에 가로채서 그걸로 치부하고 권력화하는 특수집단이 생겨나고 민중은 그대로 굶는다는 거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것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정도의 문제겠지만요."[11]

만일 리영희 선생이 북한의 식량 위기를 "뉴스위크"가 종합해서 보도한 세계 여러 구호기구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하는

11) 『창작과 비평』, 1999 가을호, pp.139-140, 한완상과 리영희의 긴급 대담에서.

데 만족하지 않고, 이를 로크가 말하는 천부인권의 관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경험론'의 상식적 관점에서 관찰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북한의 '우리 동포' 절대다수가 먹지 못해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방황하면서 그들의 지도자에 대해 대단한 애정과 존경을 가질 수 있을까 자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리 선생 뿐 아니라, '민족통일'의 구상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 지식인 일반이 만일 경험론의 상식적 관점을 그들의 접근 방식에서 배제하지만 않는다면, 그들의 시야에서 북한 인민대중으로부터 대단한 존경과 애정을 받는 지도자의 모습은 환영(illusion)처럼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2,500만 '우리 동포'의 생명과 자유를 한 손에 쥔 채 군림하고 있는 수령의 실상(reality)이 자리 잡을 것은 필연이다. 사실 경험론의 상식적 시각은 북한을 제대로 보려는 지식인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인식조건 중의 하나이다. 이를 납득하기 위해, 한 한국의 지적 풍토에서 백종현 교수의 경험론에 대한 철학적 정의를 참고하는 것이 보가피하다.

> "어떤 주의 주장을 경험론(Empirismus, empiricism)이라고 일컬을 때 '경험(empeiria, experiential, experience)'이란 감각 기관을 통하여 수용한 것, 곧 감각-지각을 뜻한다. 그리고 경험론은 "감각 중에 있지 않던, 그 무엇도 이성[지성] 중에 있지 않다(Nihil est in intellectu, quod non fuerit in sensu)"는 주의 주장을 말한다. 그래서 경험론은 경험주의 또는 감각주의(sensualism)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경험론 내지 감각주의는 인식의 원천 내지 출발점의 문제에서 그것을 이성이라고 보는 이성론과는 반대로 그것이 감각 경험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경험론은 모든 인식의 질료뿐만 아니라 타당성의 근원도 경험에서 구한다. 이성론자들이 인식의 타당성은 인식의 확실성에서 …"[12]

우리 지식인들이 세계에 널리 알려진 북한의 대기근을 경험론의 기초적 입장에서 생각해 볼 기회를 갖는 다면, 이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동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사태임을 지성

12) 백종현, 『서양근대철학』, p.64.

으로 안기 전에 우선 '자신의 감각'으로 느낀 것이다. 더욱이 해방 이후 6·25 전쟁을 거쳐 60년대 말까지 지속된 '한국의 가난'이 자신의 기억 속에 살아 있는 지식인의 경우, 북한 동포 한 사람, 한 사람이 처한 생존의 위기를 '자기의 몸'으로 느끼는 것은 당위 이전에 필연이다. 이런 지식인에게는 동포·겨레·민족 등의 개념이 (칸트의 어법을 사용하면) 직관 내용 즉 실과 피를 갖게 될 뿐 아니라, 이렇게 생명이 부여된 실체는 주격 (우리) 과 목적격 (우리의)을 갖추게 된다. 따라서 북한 우리 동포의 처지에 대한 우리의 감정과 인식은 중생에 대한 부처의 자비심, 우소가 설파하고 있는 '자기보존본능'과 함께 전도덕체계를 관치고 있는 또 하나의 기둥인 연민(pitie), 백낙청 선생이 말하고 있는 세계체제 기득권세력에 억압당하는 민중이 받아 마땅한 세계 지성의 연대감, 르완다나 에티오피아 또는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으로 쇄도하는 인도주의적·인권주의적·사해동포주의적 인류애 등과는 판연히 다르다. 우리의 것은 이 모든 고상한 감정·정신과는 달리, 우리 각자의 육체를 질료로 하는 기억에 뿌리박고 있는 만큼 철두철미 이기적인 것, '나 중심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동포의 참상을 접할 때, 우리 마음속에 솟아 나오는 것은 한(限)없는 그래서 막연한 동정심으로 끝나지 않고 통절한 분노를 필연코 수반한다. 여기서 우리의 마음은 자비와 용서의 대해로 흘러 들어갈 줄 모르고 오로지 복수의 염에 불타오를 뿐이다.

시장경제는 그것이 아무리 잔혹한 '계발독재' 하에 있더라도, 권력로서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을 전제한다. 물론 시장경제가 미약할 때는 국민징세나 개인가계에 이렇다 할 만한 자본축적도 실현되어 있지 않은 만큼, 개인이 자신의 일신(一身)과 소유물을 가동·처분할 수 있는 자유 역시 '자연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개발독재의 독려로 한국 경제가 세계시장경제에 발 빠르게 적응해 들어가자,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국부가 증이적인 속도로 증가함과 동시에 자유 또한 그 자연적 굴레로부터 해방되어 가속이 붙은 전방위적 사회 운동이 되었다. 시장경제의 발전이 이렇게 사회생활 전반에

불이닝은 활력은 물론 형이하학적 잉역. 다시 말하면 물질적 생산과 소비의 하부구조의 현상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이 현상 자체가 "자연 상태에서 이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자신의 몸과 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그 기능의 상태로부터 사회적으로 실현한 결과인 만큼, 그 안에 이미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배태(胚胎)할 수밖에 없었던 것 또한 역사적 필연이다. 시장경제의 본격화, 즉 자연 상태의 시장경제가 고전경제학이 정의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편입되는 프로세스는 인민(또는 민중)민주주의를 제치고 필연코 대의민주주의로 발전할 수밖에 없음은 세계사에 의한 실증 이전에 이미 로크 철학에서 이론적으로 예시되어 있었다. 다시 한번 백종현 교수의 「서양근대철학」에서 로크에 관한 서술 부분을 원용해보기로 한다.

> "인식론의 문제와 관련하여, 인간의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은 감각 경험으로부터 출발하며 따라서 감각은 인간의 의식[mind]과 인식 대상[real object] 사이에 매체(medium)라고 하는 경험론과 표상설(representative theory)의 주창자인 로크가 세운 정치 이론의 중추는 대의정치제(representative system)다. 감각을 통해 실제 사물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런 만큼 감각이 실제 사물을 대신하고 대표할 수 있듯이, 일반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대의원들을 통해 표현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어 일정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원들"이 합의하여 제정한 법규는 일반 시민들 모두의 합의와 같은 것이고, 따라서 일반 시민들 모두의 자기 약속으로서 보편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이다."[13]

물론 시장경제의 전제조건인 생명·자유·재산의 권리는 개발독재자 박대통령이 만들어 국민에게 하사한 권리가 아니고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제정된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담긴 국민의 기본권이었다. 그러나 이 기본권을 몇몇이 아니고 국민 대다수가 자각하게 된 과정은 국민 대다수가 본격화된 시장경제의 (대상 뿐 아니라) 주체가 되

13) 백종현, 같은 책, pp.275-276.

면서 각자가 기본권의 실제적 주체가 되고 이와 동시에 이기심과 자존심으로 뭉쳐진 인격 존재(personality)가 되는 사회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런 인격 존재는 '자기 위에 사람 없고 자기 밑에 사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이 구성하는 사회야말로 본질적으로 평등 사회이며, 따라서 더 이상 '개발독재' 밑에서 살 수 없다고 자각하게 된 것이었다.

Ⅱ. 국부(國富)와 대의민주주의

국부가 시장경제에 의해 창출될 때, 정치체제는 반드시 대의민주주의로 발전하는 법이다. 이는 우선 사실로서 세계사와 가까이는 한국 현대사를 통해 확인되었던 바다. 하지만 우리가 만일 이 경험적 사실을 '역사 법칙'으로까지 일반화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검증해야 할 두 경우가 남아 있다. 즉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우다.

중국에 관해선 우리는 앞서 "일당독재체제를 유지한 채 현 시장경제의 놀라운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었다. 사실 중국의 시장경제에로의 개방은 진척될 만큼 진척되어 한국의 한 경제 각료가 한국보다 더 자본주의적이라고 평가할 정도의 상태에 있으나, 문제는 정치는 어는 정도, 어느 방향으로 추진되었는가에 있다. 우리가 앞장에서 시도한 분석이 틀리지 않는다면, 대의민주주의의 객관적 조건은 국민이 국부의 실제적 생산자 따라서 생산된 국부의 주인인 현실과 국민이 이 현실을 자각하는 사태로 구성된다. 하지만 현재 중국 공산당이 정치 분야에서 취하고 있는 소위 개방 조처는 정도 문제 이전에 이미 그 취지에서 대의민주주의를 위한 객관적 조건의 조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사실, 중국 공산당은 이념상으로는 노동자·농민의 당이었지만, 실제로는 이들의 이익 내지 의사를 대변(represent)한 적이 지금까지 없

있던 만큼, '신흥 자본가'들이 입당하였다고 해서 이 계급의 의사를 대변한 뜻과 능력이 과연 있을까 의문이 남는다. 만일 중국 공산당이 실제로 노동자·농민의 이익을 '대변'하였다면, 건국 이래로 시행한 사회주의 경제정책의 실패가 인민 특히 노동자·농민 계급에 초래한 대재앙에 대한 책임을 지기나 추궁 당하여, 지금쯤은 해산되어 버렸거나 혹은 야당의 지위에 만족해야만 할 것이다. 게다가 인민의 이익과 뜻을 대변함에 있어 중국 공산당의 이런 생래적 무능력과 무관심의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이번 16대 당 대표회의 주석단 236명 중에 떠오른 17명의 기업가, 이른바 신홍색(新紅色)자본가들이 정치와 객관적으로 분리된 시장경제의 자본가 계층을 실제로 대변할 수 있는가가 또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공산당의 생래적 불가류성(不可謬性, infallibility)이 이렇게 지속되는 한, 이 '우수민영기업가'들이 자신들의 과거행적이나 개인재산내역에 대한 당의 철저한 심사를 거쳐 입당한다 하더라도 당 안에서 또는 당 대표회의 주석단에서 당의 오류 불가능한 의사 곧 중국식 시장경제 발전의 떠오르는 주체 세력을 대변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무리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들이 '고통선거'에 의해 대표가 되었다고 하기보다는 당에 의해 선발된 성격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의 '성분' 자체를 분석해보면, 이들은 차라리 공산당의 분신이지 순수한 시장경제 출신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점이 한 둘이 아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시장경제는 그 탄생부터 오늘날까지의 성장 진 과정이 일당독재와 불가류성의 독트린을 포기한 적이 없는 중국 공산당에 의해 관장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과도기적 성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궁극적으로 과연 어디로 이행할 것인가의 방향 문제와 — 한국의 개발독재가 건국엔 국가부도의 위기, IMF 환란에 이른 것처럼 — 필연적인 성장 유착의 결과로서 부패와 국민경제의 자기통제력 상실의 문제가 이 과도기적 현상의 저변에 깔려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가는 방향은 아마도 고전경제학이 체

계적으로 파악한 시장경제가 아니고 고전경제학이 논파(論破)한 중상주의(mercantilism) 쪽일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즉 아담 스미스 자신의 말을 인용해보면, "국민의 부(富)는 흔히 착각하듯 금은(金銀) — [달러, dollar] — 의 보유량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조직적 작업능률에 비례한다. 그 작업능률 향상의 지름길은 분업이다. 따라서 분업은 국부(國富) 증대의 필수요소이다."[14] 이 언표에서 우리가 간과해선 안되는 사항은 그것의 정치적 함의다. 시장경제에서 국부 증대를 꾀하는 데에 필수 요소인 분업에는 경제와 정치의 분업도 포함되며, 후자를 전문화·제도화한 것이 바로 로크가 주창한 대의정치 체제(representative system)다 라고 할 수 있다. 대의정부를 통해 국민은 국가 생활 전체에 대한 표상(representation)을 갖게 되는 데, 이 표상은 다시 그 내용 중 국가 생활에 필요한 경비, 즉 재정을 조달하는 국민경제 전체의 표상도 포함하는 구체적인 정치·경제 표상인 것이다. 국가 생활비, 즉 예산(budget)을 산정하는 데 대의정부가 의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국민에 의해 생산되고 있는 국부의 증감 동향인만큼, 이와 동시에 시장경제의 동태 또한 국가 생활의 틀 안에서 파악되고 정립되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간략하나마 해명하고 넘어가야 할 점은, 대의정부를 통해 국가 생활 전체로부터 국부의 증감 및 시장경제의 동태에 이르기까지 행하여지는 파악 전과정에서 지배적인 인식론적 요소(dominant epistemological element)는, 대의민주주의 과정에 대해 흔히 통용되고 있는 오해와는 반대로, 감성적 따라서 직접적 특수 표상이 아니고, 감성적 잡다(multiplicity)를 통일한 지성의 보편 표상, 즉 개념이라는 사실이다.

국가 예산 결정 과정에 시장경제의 국부 생산 동태의 개념적 — 즉 과학적 — 파악 작업이 선행조건으로서 참여하게 되면, 예산 자체는 말할 것도 없이 국가 운영 전반이 적극적으로 말하면 합리적(rational)이고, 소극적으로 말하면 무리가 없겠다고 하겠다. 또 이 적극적 관점이 주안점이 될 때, 이런 국가를 헤겔이나 베버(Max Weber)처럼

14) 「국부론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p.36에서 직접 인용.

이성 국가(rational State)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이런 종류의 예산 편성과 국가 운영을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합리성이 오직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분업 체제를 이루고 있는 단일 국가 체제에서만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국가의 예산 결정 절차나 일반 입법 절차는 동일하고 예산안 자체가 하나의 법안인 만큼, 이 합리성 문제를 베버가 하는 것처럼, 자본주의의 전제조건 중 하나로서의 법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

> "근대 자본주의의 전제조건으로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 사기업의 필요한 모든 생산수단 소유와 처분 권리, 시장의 자유, 합리적 기술, 자유 노동, 합리적 법, 이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합리적 법에 관해서 말할 때, '합리적(rational)'이란 사전에 계산할 수 있다(calculable)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업이 합리적 경영을 하기 위해서, 기업 활동 자체가 예측할 수 있는 사법과 행정의 대상이라는 사실에 의거해야만 한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나 아시아의 세습국가, 심지어는 유럽에 있어서도 스튜이트(Stuart)왕조 시기까지는 기업이 예측할 수 있는 사법과 행정은 실현되지 않았다. 왕들이 행사하는 자의적(natural)공정과 사법정의는 흔히 매우는 사면 조처와 더불어 경제생활의 계측에 끊임없이 혼선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잉글랜드 은행은 공화국에나 적실하지 군주국(monarchy)에는 맞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15]

이상의 문서과 관찰로부터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일당독재를 포기하지 않고 현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추진하는 한, 그 지도자들이 아무리 청렴결백하고 자연공학적 계량 능력이 뛰어 나더라도 국부 증가 동태의 합리적 파악에 있어, 과거 중상주의를 추구하던 전제군주국처럼 실패할 수도 있음을 매우 높은 개연성을 갖고 추론할 수 있다. 개발독재로 단기간 내에 경이적인 시장경제를 일구었으나 예상치 못한 국가부도 위기를 맞은 한국의 경우는 중국 연구를 위한 매

15) Max Weber, Histoire Economique: Esquisse d'une histoire universelle de l'economie et de la societe, 1991, Paris, Gallimard, p.297, 필자 번역.

우 유익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IMF 환란은 김영삼 문민정부의 단순한 경제정책 실패의 결과라기보다는 '대의정부'가 급증하는 국부의 동태를 합리적으로 (개념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결과한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적 재난이다. 우선 이 국가부도의 위기는, 회계장부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있는 기업에 닥치는 것처럼 느닷없이 이 나라를 찾아 왔던 것을 기억해보자. 국가가 세계시장에 연동되어 움직여가고 있는 국민경제의 동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실정은, 후에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 의한 환란 수습 과정에서 드러나는 바대로, 무엇보다도 먼저 한보 뿐 아니라 국민경제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대우, 현대 같은 재벌 기업들의 회계장부 조작과 깊은 관계가 있다. 환란 후, 대우 부실의 규모를 계산하고 확정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전문 두뇌와 인력이 필요했던 가를 기억해보자. 이렇게 대의정부에 의한 국민경제 동태 파악에 막대한 지장과 엄청난 공동을 은 초래하는 대기업을 회계장부 조작의 사연이 다름 아닌 정경 유착이라는 것인 데, 이 정경 유착이 IMF 환란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장담해 온 국민의 정부 임기 5년이 끝나 가는 지금까지도, 대북 경협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온 현대를 가운데 두고 불거지고 있는 국책은행으로부터의 4,000억 불법대출과 이 돈의 행방 의혹 그리고 2,000년 6월 현대건자의 영국 공장을 매각한 대금 1억 6,000천만 불 중 1억불이 중동 소재의 유령 회사(paper company)에 송금되어 증발한 사건 따위를 보면, 근절된 것이 아니고 횡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IMF 환란의 원인 중 하나가 정경 유착이었던 만큼, '외환위기 5주년'이 되는 현재, 환란의 원인이 치유된 것이 아니고 심행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게다가 환란의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하지 않고 환란 극복에 착수한 국민의 정부 행태 자체에서 우리는 환란의 궁극적 원인, 즉 정치경제적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사실 5년 전 환란은 국민경제 전체에 들이닥친 재앙, 국부 평가총액을 반으로 줄인 재난이었으므로 기국적 반성(reflection), 즉 대의 민주주의적 반성을 거쳐 그것의 원인 규명을 했어야 했으나, 신임 김대중 대통령은

헌법에 마련된 이 대의 민주주의적 반성 절차, 즉 국회에 의한 청문회 절차를 거르고 환란 해결에 착수했던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일년 후에 노벨상 수상자로 지명되는 김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의 한계가 노정되기 시작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헌실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이지 민중(또는 참여)민주주의가 아니며,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은 역사적 관찰에 의하던, 이론적 성찰에 따르던 대통령에 앞서 국회에 의해 구현된다. 그러나 개발독재와 군부출신 권위주의적 정부 하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상과 대의명분의 기치를 휘두르며 투쟁하던 정치가들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자, 이들은 한국의 민주주의 열망을 자신이 '직접' 수렴하여 구현하였다고 믿은 나머지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주의의 대의성(representation), 매개성(mediation), 제도성(institution)을 등한시하게 되었으며, 또 이로부터 국회의 기능도 자연히 소홀한 취급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문민정부'와 '국민의정부' 수반인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은, 심히 억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독단적(따라서 독재적 내지 천재적), 이상적(따라서 관념적이며 주관적), 심지어는 위헌적 성격 등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자에 관해 말한 것 같으면,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자신의 임기 5년에 한정시키는 언행으로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자신의 독점욕을 노출시키는 나머지, 후임자에게 민주주의 '진보'를 계승시킬 기회를 스스로 무산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대해 이런 독단적 판단을 갖고 있는 한, 국회의 기능이 대통령의 권능에 종속되거나 혹은 변도로 따로 놀 수밖에 없게 된다.

민주주의에 대해선 문민정부의 수반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 투철한 인식과 신념과 투쟁강력을 가진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구현하는 국회의 기능이 제대로 복원되지 않았다. 사실 국민의 정부에선 의료분업, 대북정책, 공적자금 등의 중차대한 정책들의 입안 및 수행 과정에서 야당과 대의론

사들의 보수적, 반민주적, 반통일적, 심지어는 반민주적 저항과 방해를 이유로 삼아, 김 대통령이 우리 민주주의의 대의성·배게성·제도성을 등한시하고 '자신이 직접' 국민에 호소하고 '시민사회'의 직접적 참여를 시사 내지 방조한 사례가 한둘이 아니어서 차라리 이것이 김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라고 할 만 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많은 사례들을 개별적으로 천착할 것이 아니고, 국민의 정부가 자부해 마지아니하는 'IMF 환란 극복'을 대의민주주의의 제도와 정신을 관철에 넣고 행한 정치의 전형적 사례로 보고, 이것의 실제 정치경제적 결과를 분석해보기로 한다. 국민의 정부가 국회 청문회를 관철하지 아니한 채 환란 수습에 착수했을 때, 이는 국회에 의해서만 대변될 수 있는 거국적 반성 과정을 노외시하고 문제 해결을 시도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이렇게 거국적 반성 절차를 거르게 되면, 사안에 대한 인식론적(거국적이며 경제정치를 총괄하는) 보편 표상(universal representation)의 성립을 포기한 것이나 매한가지다. 개인이나 집단이 반성하기 위해선 표상행위가 선행되어야 하는 데, 표상이 외부 대상과 직접적(immediate) 관계에 있을 때 반성이 감성을 통한 외부의 직접적 잉항 때문에 추론적 진행(reasoning)을 할 수가 없이 논리적 구조를 가질 수 없는 반면, 표상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혹은 외부 대상과 이떠한 직접적 (즉 감성적) 관계를 상정할 수 없을 때, 즉 신, 존재 같은 형이상학 개념들과 순수 수학 개념들의 경우에는 반성이 원동력을 상실하여 아예 스스로 중단해버리거나 내용상 실제적 진전은 없는 형식논리적 자기 공전에 만족할 수도 있다. 국민경제 전체를 뒤흔든 IMF 환란의 대상과 주체는 국민 전체(universality)와 국가 전체(universality), 즉 하나요 나눌 수 없는 '국민국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 재난의 반성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보편 표상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따라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표상을 국가에게는 국민의 표상을 매개자로서 생산하는 입법부 즉 국회에 의해서만 성립될 수 있다. 혹자는 대통령이 국민과의 직접 대화를 통하여 당면한 국가 위기에 대한 보편 표상을 만들어 낼 수 있

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보편 표상이 법에 다름 아니고 법은 행정부가 아닌 오직 입법부에서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탓이며, 이는 더 나가 삼권분립이 대의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민주주의와 개발독재, 입헌군주제와 전제군주제를 구별하는 제도임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민의정부가 '환란 원인 규명'으로서의 국회 청문회를 관철하지 않고 환란 해결을 시도한 결과, 첫째로 국민과 국가가 나눌 수 없는 일체인 대한민국이 '자기'를 '보편적인 방식'으로 반성하여 거듭날 수 있는 천우신조의 기회를 상실하였으며, 둘째로 환란 극복은 오로지 행정부 단독의 작품이 되었다.

그러네, 국민의정부가 IMF 환란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결과, 대한민국은 현재 적어도 정부의 국부 동태 파악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환란 이전의 문민정부 시절과 매우 흡사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듯 보인다. 사실,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이었던 과다한 기업 부채는 이제 고스란히 정부와 가정이 떠 안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업부채는 5년 전에 비해 약 280조 원 줄어 650조 원 수준인 반면 국가 부채는 62조 원 늘어난 122조 원, 가계 빚은 213조 원이 불어나 424조 원이나 되어 있는 실정"[16] 때문이다. 2002년 11월 말 현재, 전체 은행 대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가계 대출이 부실화되면 또 다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를 기우로서 접어둔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 경제가 자기 통제력을 상실해 가는 또 하나의 심각한 징후가 있다. 즉, 공적자금 157조 원을 들여 외환위기를 극복했다지만, 이 공적자금 투입의 결과인 국가부채의 계량에 관해선 국회든, 행정부든, 한국은행이든, 대한민국의 그 어떤 공적 기관도 '객관적으로' 확실한 숫자를 제시할 줄을 모르는 현실이 바로 우리 국민 경제가 앞으로 끌어안고 가야 할 거대한 미지수의 불확정 요인이다. "공식적인 국가 부채는 122조 원에 불과하나, 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정부 개혁실 담당을 지낸 박개성 회계사에 의하면 OECD 통계 기준은 국가 채무에 연금채무를 포함하고 있고, 한국의 공식적

16) 동아일보 사설, 2002. 12. 5, 2002. 12. 4. 기사 — 내체 위기.

인 재정상황 지표가 다른 선진국보다 좋게 나오는 것은 일종의 분식(粉飾) 회계에 따른 것으로서 정부가 직접 책임져야 할 부채를 포함하면 적어도 국가 부채는 760조 원은 된다." 외환위기의 원인 중 하나가 엄청난 부실을 은폐한 대그룹들의 조작된 회계장부에 있었던 것을 문민정부는 간과한 채 국민경제 동태를 파악하고 있었다면, 국민의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이 대그룹들의 회계장부는 정상화시키면서도 이로부터 결과하는 정부 회계장부상의 변화에 대해선 이렇다 할 공적(즉 국가 보편적)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경제에 대한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능력에 관한 한, 문민정부와 국민의정부 사이에 이렇다 할 차별화는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겠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선 정부 회계장부의 내용은 오직 국민경제에 의해서만 채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부발표에 의한 국가부채와 현 정부에서 일한 전문인 및 언론사가 추정하는 국가부채 사이에 실존하는 공적 불확실성은 그 자체가 국민경제 내부에 심어진 불확실성이며, 이는 동시에 이 엄청난 국민 부담을 사전에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즉 필수적인 대의민주주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가시켰기 때문에 위헌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게다가 이 '천문학적' 숫자로 표기된 '불확정'의 국가부채를 국민에게 대의적으로 책임지거나 대변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는 대한민국에 더 이상 실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두 달 안에 행정부를 떠날 것이고 야당이 다수인 국회는 대선에 정신이 팔려 이 불확정의 국가부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예산안을 또한 제대로 심의도 하지 않고 (즉 대의적으로 무책임하게) 급속으로 무더기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Ⅲ. 북한 개방과 인권

지금까지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의 치적으로 꼽히던 IMF 환란의

성공적 극복이 결국은 천문학적 숫자의 불확정 국가부채를 국민에게 유산으로 남기게 된 진짜을 분석하여 왔다. 이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또 하나의 치적, 곧 햇볕정책의 최종결과를 진단할 차례다. 한 정책의 성과를 알기 위해선 우선 정책의 동기를 알아야 하는 데, 햇볕정책의 동기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나유에 인용하는 노벨 평화상 위원회 군나르 베르게 위원장의 평가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김 대통령이 한국과 동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와 인권, 특히 북한과의 평화·화해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라고 선정 이유를 밝히고, 또 "김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통해 전쟁과 적대로 50년간 이어졌던 남북관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했고 이제 한국에서도 냉전이 종식될 것이라는 희망이 싹텄다"고 평가했다.[17] 이렇게 동기의 관점에서 볼 때, 햇볕정책은 세계적 양심의 지지를 받은, 북한과의 평화·화해, 냉전 종식을 추구하는 정책이었다. 게다가 이 동기의 타당성에 대한 신념은 노벨상 수상을 통해 도덕적 권위를 인정받아 고무된 김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의 인류 보편 가치를 신봉하고 냉전 종식을 열망하는 한국 지식인 대다수에게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이들은 동기 '실현'에 필수적인 '정책시행'에서 필히 나타나기 마련인 현실적 장애 및 제한 조건들을 직시하지 못하였는데, 이런 인식상의 착오가 일어난 것이 너욱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실제로 햇볕정책은 2000년 말까지 이렇다 한 현실적 장애를 만나기는커녕 오히려 국내외의 일광적 지지를 받으며 '목적지'로 순항을 계속하였고, 막상 2001년 들어와 신임 미국 대통령의 취임, 9월 11일의 테러 같은 중차대한 사건들이 일어났어도, 햇볕정책 입안자, 실행자, 지지자들은 이것들을 현실상의 제한 조건들로서 심각하게 연구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이상 추구에 열중하였다. 자신의 동기의 정당성만을 확신한 나머지 현실을 무시하는 자를 이상주의자라고 한다면, 햇볕정책에 관해 이런 이상주의자의 현실무시의 첫 번째 결과는 다름 아닌 2001년 3월 미국 대통령 부시와의 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받은

17) 중앙일보, 2000. 10. 14. 김대중대통령 노벨평화상, 특보에서 인용.

냉대와 모욕이다. 신임 대통령 부시가 전임 대통령 클린턴과 얼마나 다른 철학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햇볕정책 입안자, 집행자들이 사전에 심각히 연구하지 않은 채, 한국 대통령이 햇볕정책의 적절성과 효과를 미국 대통령에게 납득시키려고 시도한 결과, 진사가 후사로부터 받은 차가운 반응과 모욕(This man)은, 만일 햇볕정책을 '현실적'으로 추진하였다면 일어 날 수 없는 사건이었다. 더욱이 한반도에서의 '냉전 종식'이 햇볕정책의 목적 중 하나라면 미국 행정부의 입장은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할 객관적 현실 조건인 것이다. 사실 햇볕정책을 냉전 종식의 역사적 관점에서 진단해보면, 2002년 11월만 현재 햇볕정책의 성과 내용을 실제로 규정한 것은 2000년 12월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의 비전이 아니고 2001년 1월 출범한 미국 신임 공화당 행정부의 세계관이다.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세계관은 사실, 같은 해 1월 한국에서도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으로 일했던 제임스 베커가 중앙일보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알고 싶어하는 자에게는 알려졌다.

"- 남북의 통일문제를 어떻게 조망하십니까. [중앙일보 최규선 연구원 질문에, 베커가 대답하기를]

- 통일은 바람직한 뿐 아니라 불가피합니다. 독일 통일은 동독 경제의 완전한 파탄과 동독 정부의 완전한 실패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실패한 공산주의 국가 정부의 항복과 성공한 민주주의 국가 정부의 인수가 뒤따른 겁니다. 북한 경제는 실패했습니다. 평양은 자국민을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영토와 인민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제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간에, 통제경제와 시장경제간에, 그리고 노예화된 국민과 자유로운 국민간에 실행가능한 합병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가까운 장래의 최선은 남북한이 정세 정치적 협력을 향해 나아감으로써 평화와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이 어떤 경로를 거칠지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군요. 나의 확신 중 하나는 완전하게 통일된 한국은 오늘날의 남한과 매우 비슷한 형태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민주적이고 시장경제를 이루며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국가가 되겠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한은 성공했고 북한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남한 당국자들에게 충고한다면 시두르시 말라

는 것입니다. 역사는 당신들 편에 있습니다."[18]

2년 전이 아니라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북한 현실은 부시 대통령이 선언한 대로 수백만 국민을 굶어 죽도록 내버려두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녹재 국가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이런 북한에 대해, 11월 18일 부시 대통령이 대북성명을 통해 밝혔듯이, 침공을 하지 않고 당분간은 단계적인 경제제재 조치에 만족하기로 한 전략은 동서냉전의 종식은 공산주의 국가의 완전한 경제 파탄으로부터 걸과했다는 전임 공화당 행정부의 세계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전략인 것이다. 역사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루는 체제 편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적어도 미국 행정부에게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뿐 아니고 한국 사회의 많은 이상주의자들은 한반도에서의 냉전 종식에 대한 미국 공화당 행정부의 이런 경험과 전략을 자신들의 이상 실현의 현실적 조건으로 고려하기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였다. 구체적이 예를 들어보면, 백낙청 선생은 "창비 2002년 봄호"에 게재된 글 "한반도의 2002년"에서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의 계시록적 테러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상황이 희망적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제 동서냉전이 끝나고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결정적인 불안정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한반도가 분단체제의 극복을 통해 좀더 나은 세월을 내다보게 된 것은 당연한 보상이다. […] 2001년 한 해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남북관계의 후퇴 내지 답보도 그다지 우려할 상황이 못된다. 먼저, 6·15 선언의 유효성을 쌍방이 강조하고 있는 한 — 주로 상대방에게 그 실행을 나그치는 방식일지라도 — 6·15 이전으로의 '후퇴'는 사태의 진실과 동떨어진다. 정부측의 홍보가 아니더라도 6·15가 아니었던들 9·11 직후 한반도 정세가 얼마나 험악했을 지는 누구나 실감하는 일이다. '답보'로 말하더라도, 2000년의 성과가 워낙 눈부셨기 때문에

18) 중앙일보, 2001. 1. 8. 최규선 연구위과 제임스 베커의 인터뷰에서 인용.

엣난 간으면 훨씬 눈에 띄었을 민간 또는 정부간 접촉들이 답보에 불과한 것으로 비춰지는 면이 있는 것이다."[19] 그런데 문제는, 선생이 여기서 강조하는 대로 햇볕정책이 2000년 6월 15일부터 2002년 봄까지 북한과의 평화·화해 및 냉전 종식이라는 목표를 향해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는 동안, 북한은 (남한 정부를 따돌린 채) 미·북 기본합의서, 핵 비확산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 한반도 비핵지대화 남북공동선언 등을 위반하면서 농축 우라늄에 기초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백 선생에게는 북한과의 평화·화해 및 '분단체제극복'을 지향하는 운동, 곧 햇볕정책의 실현을 방해하는 쪽은 북한이 아니고 미국 공화당 행정부인 것이다. "지금은 미국정부와 그 정책에 영합하는 국내세력들이 한반도의 안전과 한국경제의 안정에 대해서도 명백한 위협임을 대중들이 실감하게 된 것이다. […] 위태한 가운데도 낙관을 허용하는 한 가지 구체적 사안이 2002년 FIFA 월드컵이다. 부시 대통령이 서울에 내려는 2월 19~20일 양일간이나 5월말에 시작하는 월드컵 기간 중에 미국의 대북공격이 없으리라는 것은 짐쟁이가 아니더라도 예언할 수 있는 일이다. 이번 월드컵이 한국 단독이 아니라 한국보다 미국인의 눈에 한 급 높아 보이는 일본과의 공동개최라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다시 말해 올 봄만 잘 넘기면 한반도는 일단 안전지대로 편입되리라는 것인데, 물론 월드컵 자체가 성공적으로 치러진다는 전제 아래서다."[20] 그러나, 그러나 월드컵 행사가 절정에 오른 날, 4강에 오른 한국이 거국적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일광하던 바로 그 날,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북한군의 기습 선제공격으로 국군의 초계정이 격침된 사건을 점쟁이가 아닌 백 선생이 예상하지 못했더라도, 지금에는 이를 어떻게 '반성'하고 있을까, 그것이 문제다.

백 선생이 미국에 대해선 이런 피해망상증에 가까운 견해를 갖고 있으면서 북한의 현실은 직시하지 않는 것은, 물론, "동시냉전의 종

19) 백낙청, 같은 잡지, pp.19-22.
20) 같은 잡지, p.27.

말은 자본주의의 승리라기보다 그 최종단계의 시작으로 보아야 한다"는 백 선생의 역사철학과 깊은 연관이 있다. 실제로 백 선생의 이 역사철학을 한반도 분단체제극복에 적용하면 우리는 백 선생의 다음과 같은 언표를 듣게 된다: "저는 남북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말하듯이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반쪽 국가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반쪽 국가가 분단체제라는 틀 안에 얽혀있는 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어느 쪽도 제대로 된 사회주의나 자유민주주의가 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요. 북한의 사회주의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고요…"[21] 그리고 바로 이런 역사철학으로 인하여, 백낙청, 리영희 선생을 필두로 하여 수많은 한국 지식인들에게는 우리 '민족통일'이 독일통일처럼 "실패한 공산주의 국가 정부의 항복과 성공한 민주주의 국가 정부의 인수가 뒤따르는 식"으로는 될 수도 없고 (되어서는 안 될)뿐 아니라, 부시 대통령이 북한 정권을 "악의 축"으로 낙인찍는 것조차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이들에게 유일하게 남는 '현실적인'길은 남한과 북한이 서로의 체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recognition)하고 대화와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 지금으로선 정의할 수 없는 미래의 어떤 통일체제로 점진적으로 무한한 인내를 갖고 접근하는 길이다.

백 선생과 리 선생은 김대중 대통령 같이 개발독재 시절부터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북한과의 평화·화해를 위해 노력하신 인사들'이라는 것은 적어도 이 시대를 살아온 지식인들에게는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들이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반쪽 국가',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반쪽 국가',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나 국가가 아닌 북한과 남한' 등을 만할 때, 이 개념들에는 '경험적 내용', 곧 '자신들이 체험한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 과정'이 누락되어 있다. 이들처럼 해방 이후 지금까지의 한국 역사를 살아온 지식인이라면 월 50남러도 한 가족이 살아야 하는 인생과 월 5,000남러

21) 『흔들리는 분단체제』, 백낙청 지음, 1988년 5월 창비사, p.59 주석에서 인용.

의 수입이 있는 인생의 차이란 단순한 양적·물적 차이가 아니고 개인의 '생명과 자유'에 직결된, 곧 인권상의 차이라는 것을 '자기 경험적'으로 안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권이 인류 보편 가치라는 것을 안고 나서도 생명이란 우선 먹이야 유지되고 자유란 무엇보다도 먼저 살아 있는 신체를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움직이는 자유라는 것을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남쪽 국가'에선 70년 전후에 벌써 수많은 시위와 학생 데모 그리고 급속히 증가하는 해외 유학생 수가 증언하는 바대로 이 굶주림으로부터의 자유와 신체 이동의 자유라는 본질적 인권이 사회 전면에 확산되고 있었던 반면,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북쪽 국가'의 이 본질적 인권 상황은 '신의주 특구', '개성공단' 등의 개방정책이 북한의 햇볕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서 받아들여 질 때까지도 우리의 '인권', '민주주의', '인간의 얼굴' 이상주의자들에게는 심각한 관심의 대상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괄호 안에 넣어지거나 심지어는 송두리째 도외시되었다. '통 큰 정치'가 양빈을 초대 신의주 특구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특구 개발계획을 발표했을 때, 이 계획이 전제하는 신의주 특구를 북한의 여타 지역과 격리하는 장벽건설, 2개 사단 병력을 투입해 신의주 주민 50만 명을 소개시키고 정보기술 인력 5만 명을 포함한 개발인력 20만 명을 새로 입주시킬 예정 따위가 (신체 이동의) 자유와 소유라는 천부인권, 그것도 다름 아닌 '우리 동포'의 천부인권을 무시하는 전제 군주적 발상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안고 절규한 지식인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던 것도 또한 사실이다. 한국과 동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와 인권 운동에 선구자적 기여를 한 김 대통령 자신도 설사 본인은 북한의 첫 개방시도가 이런 국가 규모의 인권 유린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국가 원수로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응 조치도 취하기에는 이미 때는 늦었던 것이었다. 그 까닭은 김 대통령은 2000년 6월 남북수뇌회담 이후 2002년 9월 아세안 올림픽경기까지 햇볕정책의 성패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걸다시피 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를 불과 몇 개월 남겨두고 햇볕정

책의 최후의 성과로서 기록되어야 한 김 위원장의 개방정책에 대해 무엇이고 운운할 처지에 있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하기에는 때는 이미 너무 늦었던 것이었다. 자유와 재산이란 인권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대전제이면서 동시에 대의민주주의의 대전제다. 이것은 존 로크 이후 세계사와 철학이 검증한 진리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박정희의 개발독재를 늦기는 늦었지만 흉내내지 답습할 수 있다고 믿는 두뇌가 있다면 그 두뇌는 70년대의 한국을 살아보지 않은 두뇌임에 틀림없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신임 대통령의 선출을 볼 날이 불과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지금, 햇볕정책이 직시해야 할 북한의 현실은 "북한과 남한 당국간에 오고 간 각종 대화와 협력"이 아니고, 4박 5일 동안 북한을 방문했던 제임스 T. 모리스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이 2002년 11월 16일 밝힌, "북한 내 주민 640만 명이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이다.[22] 다시 말하면 부시 공화당 행정부가 북한을 보아 온 시각이었던 '악의 축', 그것의 '경험적 내용'이 가시화된 것이 바로 남한 당국이 최후로 직면한 북한 현실인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우리 민족 640만 명이 굶주리고 있는 이 현실의 원인과 책임은 사유재산권의 폐지와 생산수단의 국가독점을 기초로 하는 사회주의 독재체제에 있음은 철학과 역사가 검증을 완료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 기초와 이 정치체제는 건드리지도 않은 채 소위 시장경제 도입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미 멸망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 일반과는 달리 북한 체제의 특수성은 독재체제 자체가 유산처럼 이버이 수령으로부터 아들 수령에게 상속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후자의 시장경제에 대한 생각의 한계 내지 특수성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의 개방정책의 구상과 실천 과정에서 드러나는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시장경제에 대한 김 국방위원장 생각의 특수성과 한계가 가장 눈에 띄게 드러나는 첫 번째 사례는 신의주 특별행정구 건설의 전권을

22) 조선일보, 2002. 11. 16. WEP사무총장 "북한주민 640만 명 기아상태."

위임받을 행정장관 양빈의 임명 과정이다. 이 임명과 곧 이어 따라온 중국정부에 의한 양빈 장관의 구금에 대한 편파적 해석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여기서 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의 진언을 인용하는 것으로 그치기로 하자. "지난달 (9월) 16일 방북해 북한 고위 인사와 만난 박 전장관은 "양빈 신의주 특별행정구 장관에게 문제가 있다는 정보를 북측도 알았지만 양 장관을 '양아들 같은 사람'이라고 만하는 김 위원장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못해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만했다. 또 양 장관의 후임 문제와 관련해 "북한 사람을 재 장관으로 임명하는 대신 외국인을 고문에 앉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23] 양빈을 신의주 특별행정구 장관에 임명하는 과정에 어버이 수령에게 양자로서 충성 맹세(와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2,000만 불의 선물 증여)가 선행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신의주 개발 계획은 결국 수령 가문의 개인 비즈니스에 지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려도 과대망상의 소치라고 비난받지 않아도 좋을 듯 싶다. 이것이 필자 개인의 주관적 상상의 소산일 수 없는 까닭은, 북한 인민의 (신체 이동)자유와 재산 권리를 박탈한 채 국가가 생산수단을 독점해 온 수령체제로부터 필연적으로 결과하는 (그러니까 연역적으로 확실한) 행태이기 때문이다. 또 동일한 논리에 따라, 신의주 특구 계획뿐 아니라, '금강산 개발', '개성공단' 등의 개방정책 자체가 '적어도 지금까지는' 본질적으로 수령 가문의 장사 김정일의 개인 비즈니스이었다. 현실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수령체제가 계속되는 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무리 인민의 의사를 대표(representation)하고 싶어 애를 쓴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인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대의민주주의 장치, 곧 자유 보통 선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입안하고 시행한 햇볕정책의 실책은 김 국방위원장이 북한의 인민을 제도적으로 대변할 수 없는 이 명백한 사실을 도외시한 채, 김정일과의 대화에만 햇볕정책의 성패를 걸었다는 데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김 대통령의 민주주의관은 대의민주주의 보다는 직접

23) 중앙일보, 2002. 10. 3. 박재규 전통일 면담 공개.

민주주의에 가까웠고, 적어도 북한과의 교섭에서는 인민의 인권 문제는 '일단' 괄호에 넣고 실제적 권력자와의 대화에 집중했던 사실로 보아, 그의 외교는 왕후장상의 외교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햇볕정책이 예상했든 못했든, 김 국방위원장이 원하든 원치 않든, 수령체제의 역사 심판의 날은 마침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 이 역사 심판은 물론 미국 침공에 의해 개시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날 착공예정인 개성공단의 노동자 임금을 둘러싸고 남북한 당국자들이 벌리고 있는 협상에서 그 재판정 개정을 알리게 될 것이다. 현재 국민 중 640만이 굶주리고 있는 상태에서 북측이 80~110달러를 개성공단 노동자 한달 임금으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특히 개성공단에 진출하려는 남한 기업들은 북측 노동자의 적정 임금을 40~50달러로 보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노동시장의 자유화 문제가 아직 미결정 상태로 남아 있다.

개성공단 착공을 한 달 앞에 두고 남북 '당국자 간'에 해결해야 할 '노동시장 자유화' 문제는 이제 남북 당국자의 손을 떠나면서 북한 정권의 사활을 결정할 역사의 재판정이 되었다. 노동시장 자유화가 북한 정권에게는 더 이상 미루거나 회피할 수 없는 조치인 것은 남한 기업들이 (햇볕정책 하에선 기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불가능한) 보상금 없이 들어갔다가 손해 볼 것이 뻔한 개성공단에 투자할 리가 없기 때문이고, 북한 정권으로서는 개성공단에 남한 기업들이 대거 투자하지 않으면 인민의 대다수를 만성적인 식량부족으로부터 구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일 노동시장을 자유화하면, 우리 동포들은 반드시 (신체이동의) 자유와 사유재산이라는 자본주의 인권을 되찾고 자신들의 생명보존의 권리를 자각하여 독재자를 역사의 심판대로 끌어 낼 것이다.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노동시장 자유화 자체를 거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령 체제 자체의 안전을 미국으로부터 약속 받는 것을 노동시장 자유화의 필수 선행 조건으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후자 선언지가 북한 정권이 지난 10월초 핵 개발 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하여 '핵 파문'을 일으킨 이후

지금까지 미국과 벌리고 있는 '불가침조약 체결' 요구 게임이다. 즉 미국이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북한의 안보를 보장한 경우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이 불가침조약 체결의 형식으로 수락하라는 요구인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개방정책의 선결 조건인 노동시장의 자유화를 한없이 질질 끌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볼 때, 수령체제와 이것의 유일 회신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제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서있다. 그러면 햇볕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정책이 최종적으로 임한 현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알아보자.

> "김대중 대통령은 2002년 11월 19일 청와대에서 통일고문들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북핵문제 등과 관련 […] "부시 미 대통령이 특별성명을 통해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재확인했고, 이는 북한의 불가침조약 체결 요구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북측의 답을 보면서(북한 핵문제를) 처리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의 합의는 국제적으로 북한을 고립시켜 결국 굴복시키는 것이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살 길을 열어주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회로를 열면서 몰고 있다"면서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성공적인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그러나 "진행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은 안 되며, (대북) 경제제재를 할 경우 북한이 굴복할 수도 있지만 제네바 협정을 포기, 결국 전쟁으로 인결된 수도 있다"면서 "또 북한이 파멸하고 정권이 붕괴되는 상황도 있으나 수백만의 피난민이 발생하는 등 나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는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는 이 문제들에 대해 발언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24]

여기서 우리는 김 대통령에게 정치철학과 역사철학에 관련된 몇 가지 이의 제기를 하고 이 글을 끝맺고자 한다. 첫째,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살 길을 열어주겠다는 입장을 만할 때, 이는 북한 우리 동

24) 조선일보, 2002. 11. 19. [김대통령] "부시도 분명 밝혔으니 북이 답해야" 기사에서.

포의 살 긴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령체제와 김정일의 살 긴인지가 분명치 않다. 예나하면 대의민주주의와 인민(네지 직접)민주주의를 혼동하지 않는 한, 김정일이 북한의 우리 동포를 대변한다(represent)는 것은 완진히 불가능하고 만일 대변하였다면 북한 경제의 완진한 실패에 책임을 지기나 추상 당하여 지금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을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확실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체제의 성격 때문에 김정일은 북한 유일 군벌이며 억만금의 재벌인 반면, 640만 명의 우리 동포는 만성적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상태가 이렇나 할 변화 없이 계속되어 왔던 것이 아닌가? 둘째, 인권과 민주주의는 인류 보편 가치인데, 이를 잔 알고 있을 김 대통령은 왜 북한의 강제 파단과 국가적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이 북한 정권과 김정일에 있음을 공개적으로 문제삼은 적이 없었던 가이다. 생명·자유·소유라는 천부인권은 결국 제 몸을 움직여 먹고사는 기본권을 말함인데, 수백만 명의 우리 동포가 만성적으로 굶주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통감하고 있을 김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는 덮어 둔 채 김 국방위원장과의 대화에만 치중한 것은 이 후자의 경제파탄 과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을 두둔하는 결과를 가져왔는지도 모른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이 모호한 태도 때문에 셋째 의문이 불가피하다. 대북 경제제재를 할 경우 북한이 굴복할 수도 있지만 제네바 협정을 포기, 결국 전쟁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또 북한이 파멸하고 정권이 붕괴되는 상황도 있으나 수백만의 피난민이 발생하는 등 나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북한이 파멸하고 정권이 붕괴되는 일이 생기면 이것이 북한 우리 동포에게도 나쁜 일인가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통치자와 인민 사이에는 그 체제 자체의 성격 때문에 그 어떤 유대의식, 그 어떤 공감대도 존재할 수 없고 오히려 전자가 후자의 생명과 자유를 한 손에 틀어쥐고 군림할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북한이 파멸하고 정권이 붕괴하는 상황은 후자에게는 하늘이 준 해방의 기회라는 것을 부인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혹은 이 가정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기 위해 경제제재를 삼가 한다면 사회주의

를 표방하던 반쪽 국가가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반쪽 국가가 되어 북한은 결국 유일 군벌·재벌 정권이 통치하게 되는 것이냐 아닌지의 의문이 남는다. 한 반도는 우리가 주인이라고 하는데, 이 발언은 현 수령체제의 유지를 전제하고 있는지, 전제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호하기만 할 뿐이다. 그것이 우리 민족, 우리 국민을 의미한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민족, 우리 국민의 아우성에 몇 번이나 책임을 지고 응하였던 가의 의문이 남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김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북한 정권이 붕괴되어 수백만의 피난민이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적으로 예상하여 이에 대한 준비를 하였던 가를 반성해 보자. 이런 가정적 예상과 준비가 결코 한가한 서생의 소일거리일 수 없고 대한민국 국가 원수의 헌법상의 의무인 것은 이것이 바로 동서냉전이 끝나는 역사 법칙이었기 때문이다. 독일 식 '흡수통일'을 있는 수단을 다하여 피해 가는 것이 햇볕정책의 골자였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로서 여기서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으나, 문제는 흡수통일의 기회가 역사 필연성에 의해 우리에게 들이닥쳤을 때, 우리는 경제적으로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현실이다. 김대중 정부의 유산인 천문학적 불확정 국가부채를 끌어안은 대한민국은 이 세계사의 최종 심판에서 선물을 수용할 수 없는 처지인 것이다. 그날이 오면 "한반도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생각은 이상이 아니라 망상으로 전락하고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현실적으로 누구인지 확고히 단정할 수 없을 위험이 너무나 크다.

참고문헌

백낙청, 『흔들리는 분단체제』, 창작과비평사, 1998년 5월.

백종현, 『서양근대철학』, 철학과 현실사, 2001.

『창작과 비평 』, 1999 가을호

『창작과 비평』, 2002년 봄호

토드 부크홀츠, 이승환 역,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김영사, 1994.

Adam Smith, ed. by Edwin Cannan, 『The Wealth of Nations』, The Modern Library.

Max Weber, 『Histoire Economique: Esquisse d'une histoire universelle de l'economie et de la societe』, 1991, Paris, Gallimard.

Marx & Engels, 『Manifeste du Parti communiste』, Mille Et Une Nuits, 1994, Paris.